

6/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윤대엽



윤대엽(尹大燁) 연세대학교 정치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 및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비교정치경제다. 연구 성과로는 “The End of Korean Model? The Politics of Export-led Development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2013), 「제도적 재량권과 산업정책의 정치」(2012), “Industrial Policy in an Integrated World”(공저, 2011)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4년 8월 개최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상호의존의 역설: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경제관계」를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문제 제기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둔 한일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사, 영토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아시아적 모순 구조를 대변한다. 역사, 영토, 정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때마다 제기된 것은 경제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쟁점과 분리해야 한다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이다.¹ 1965년 한일협정은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정치적 결단일 것이다. 위안부, 징용피해자, 재일교포, 그리고 한일합병 조약의 무효화라는 식민지배에 관한 쟁점은 물론 극렬한 반일시위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이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우선의 논리 때문이었다. 한일 간 정상외교가 최장기간 단절되고 있는 최근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경분리 입장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² 아울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인식 문제와 경제의 분리, 아베 정부와 일본 전체의 분리, 그리고 정상회담과 다른 경로를 통한 노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3대 분리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³

한일 경제 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의존과 경쟁이 공존하는 경쟁적 의존(competitive dependence)으로 요약된다. 상대적인 무역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의 불균형은 오히려 증가해왔다. 1967년 44.5%에 달하던 대일 수입 비중은 2013년 11%까지 감소했고, 수출 비중도 1973년 3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6.2%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대일 수입에서 80%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교역 규모의 상대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

1 반면 일본의 경우 한일 경제 관계에서 줄곧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했고 이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한 일관된 답변 원리이기도 했다. 2012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자 관련 판결 이후 일본 재계는 1965년 한일협정에 반하는 정치적인 판결이 한일 경제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 『연합뉴스』, 2014. 10. 11.

3 이는 이원덕 교수가 한일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2014. 6. 10.

형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출상품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한국의 일본 의존적 수출 산업구조 때문이다.⁴ 일본 의존적 수출 구조가 심화되는 한편으로 철강, 화학,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한일 양국 주력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기준(HS4)을 기준으로 2012년 한일 50대 수출품목 가운데 중복되는 품목은 26개로 52%에 이른다. 2000년 20%였던 경합비중이 2002년 42%, 2006년 50%, 그리고 2012년에는 52%까지 증가한 것이다. HS2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품목 10개 가운데 9개가 일본과 중복되며 한일 간 경합산업이 각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각각 68%, 73.6%에서 2012년에는 85.9%, 82.4%까지 대폭 증가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일 양국 산업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경분리라는 원칙과는 달리 경쟁적 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인식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 때마다 대일 무역적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위기 지표의 하나로 논의되는가 하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세계시장에서 한일 경합 산업의 생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최근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인식'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1970년대부터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이 시행되었다. 소위 자유주의적 전환의 계기로 인식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산업관련 법제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산업정책이 계속되었다. 특히 1999년 제정된 '부품소재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은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육성하기 위한 10년 기한의 특별법으

4 한국의 총수출이 1% 증가하면 대일 수입은 0.73%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한국 수출산업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화학 35%, 금속 52%, 일반기계 67%, 전기기계 55% 등으로 일본의 68%, 76%, 86%, 그리고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杓村秀樹, 「輸出による国内付加価値の誘発構造: 日中韓の現状比較と, 今後とるべき戦略」, 『JRIレビュー』 6(1), 2014, 4쪽.

로 제정된 것이다. 대일 무역 불균형은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산업화 경로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다. 최종재를 조립해 수출하는 대기업에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산업구조의 문제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제적 선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발전의 구조와 성과가 상호 의존적 분업 관계가 아닌 구조적 역조 관계로 인식되었고 불균형한 경제 관계의 재균형을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역사, 영토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한일 경제 관계의 성격을 인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또 수출 주도 발전이라는 발전전략의 인식틀 하에서 경쟁과 의존이 공존하는 한일 경제 관계는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되어 왔는가? 이 연구는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경제적 이익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공유된 인식으로서의 역사인식(historical perception), 수출 주도 발전전략과 그 결과로서의 산업구조에 기반하는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그리고 구체적인 대일 산업정책으로 구체화된 정책이념(policy idea)과 같은 요인이 산업정책 등의 정책이념으로 구체화되어 한일 경제 관계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인식이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와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역사 문제나 전략 인식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일 경제 관계 발전에 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제 관계에서 비합리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구성주의 정치경제 논의에 기반하여 대안적 분석개념을 검토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각각 역사인식과 발전전략이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역사적 시각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정책이념이 대일 경제 관계의 재균형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온 사례를 분석한다.

2. 기존 논의와 분석틀

1) 기존 연구와 평가

한일 경제 관계의 발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지역 차원의 구조적 논의와 양국 관계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 등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동아시아의 일본 의존적 산업화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플라잉기즈모델(Flying Geese Model)이다. 플라잉기즈모델은 산업화를 주도한 대장 기러기인 일본이 설비, 기술을 하청이나 합작, 투자 등의 형태로 주변국에 이전하고 수직적으로 계열화함으로써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가 형성해 왔다고 설명한다.⁵ 자본, 노동, 기술 등의 비교우위 변화가 내부적으로는 주기적인 산업생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일본 중심의 산업화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이다. 플라잉기즈모델에 따르면 후발국은 선진국의 자본 투입과 기술 이전에 따라 선도국과 동질적인(homogenization) 산업생산 주기를 밟으면서 순차적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냉전형 발전모델은 일제 식민통치의 구조적 유산에 기반하여 냉전이라는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 하에서 수직적 분업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자본재 공급기지로서의 일본, 수요 흡수지로서의 미국, 그리고 한미일 간의 경제 관계를 추동하는 미국의 냉전 전략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구조적인 요인이다.⁶

이와 같은 논의는 경쟁적 의존이라는 한일 경제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우선 노동, 자본, 기술의

5 플라잉기즈 모델에 관한 논의는 Kaname Akamatsu,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Developing Economies* 1(Preliminary Issue), 1962; Justin Yifu Lin, "From Flying Geese to Leading Dragons: New Opportunities and Strategies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IDER Lecture,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MOZAMBIQUE/Resources/WIDER_Lecture-Justin_Lin-05-03-11.pdf(최종 검색일: 2014. 10. 20).

6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 Deyo, Fredric C.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따라 일본, 신흥산업국(NIEs), 그리고 후발 산업국의 산업이 순차적으로 발전한다는 예측과는 달리 양국 주력산업의 상호 경쟁 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둘째, 한국을 비롯한 대만,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존적 산업화 패턴이 심화되어 왔다. 부품소재 산업 부문의 대일 의존이 심화되면서 일본 의존적 지역생산 네트워크(regionalized production network)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산업 이전을 통한 위계적 산업관계 형성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의 기술 이전이 지체되면서 자립자급족의 산업구조를 완성해온 일본과는 달리 주변국의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발전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⁷ 셋째, 더구나 해외 직접투자나 노동의 이동과 같은 경제적 세계화는 산업생산주기(life cycle of production)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일본경제산업통산성은 이미 2001년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들어 순차적인 발전을 가정한 플라잉기즈모델 패턴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⁸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류상영,⁹ 류상영·이승주¹⁰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일본 의존적 구조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화해 왔음을 설명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산업화가 일본으로부터 학습과 의존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그리고 철강 산업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창조적 변용 또는 단절적 혁신을 통해 일본과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와 기술 의존도는 1980년대부터 축소되어 온 반면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7 류상영·이승주, 「탈냉전기 한일경제관계와 플라잉 기즈 모델」, 『국제정치논총』 43(2), 2003; Mitchell Bernard and Ravenhill John,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Model: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 1995, January.

8 JETRO,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Trade*, Toky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http://www.jetro.go.jp/en/reports/white_paper/trade2001.pdf(최종 검색일: 2014. 10. 14).

9 류상영, 「박정희 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 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일본연구논총』 제33호, 2011, 여름호.

10 류상영·이승주, 「탈냉전기 한일경제관계와 플라잉 기즈 모델」.

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경우 일본과 경쟁이 증가해왔다. 한국 경제가 일본에 대한 단절적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쟁 우위를 위한 지도자의 정책이념, 정부의 역할, 세계 시장의 조건 등이다.

한편 일본 연구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한국 경제와 한일 경제 관계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설명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국민 경제 지향적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었다면 1997년 이후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성장모델로 변화했다는 것이다.¹¹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는 대기업 주도로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이 확대되는 동시에 FTA를 통해 세계 진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 경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한일 경제 관계가 수직적 의존에서 수평적 경합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일부 산업경쟁력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격했지만 부가가치, 직접투자, 기술 무역에서의 일본 의존적 특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가 한일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은 상반된다. 수평적 경합관계로의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각¹²이 있는 반면 한일 경제 협력의 강화요인으로 해석¹³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일 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일 경제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와 같은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경쟁우위(comparative advantage)라는 정치적, 전략적 인식이 작용했다. 그러나 철강산업과 같은 개별 산업의 혁신적 변용의 사례를 한일 경제 관계 전반의 구조화 요인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일 적자를 유발하는 기계, 부품소재 등에 대한 산업정책이 포괄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일본 연구자들 역시 글로벌화된 한국 경제,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개

11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관한 논의는 佐野孝治, 「韓国の成長モデルと日韓経済関係の変化: 日韓関係変化の経済的背景」, 『商學論集』 第83卷 第2号, 2014年; 向山英彦,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に強まる日韓経済関係」,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12(4), 2012年; 佐野孝治, 「グローバル化と韓国の輸出主導型成長モデル」, 『歴史と経済』 第219号, 2013 참조.

12 佐野孝治, 「韓国の成長モデルと日韓経済関係の変化: 日韓関係変化の経済的背景」.

13 向山英彦,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に強まる日韓経済関係」.

입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경쟁적 의존이라는 한일 경제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변용’이라는 정책이념 형성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식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쟁산업 전반에서 경쟁력 향상, 그리고 최근에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대일 경제 관계 재균형을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한일 경제 관계의 비경제적 요인

자유주의 경제이론은 경제 관계의 객관적 이익이 비교우위에 의한 분업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상호 의존에 기반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한다.¹⁴ 그러나 역사, 영토 등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상존하는 한일 관계에서 경제 협력 문제가 경제적 이익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¹⁵ 해방 이후 한일 경제 협력의 문제는 경제적 침략, 경제적 종속 등과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일협정 체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대일 무역적자가 무역 역조로 개념화된 것은 비대칭적인 한일 경제 관계가 비정상적인 것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한일 경제 관계의 재균형, 즉 한일 경제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무역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협력이 경제적 이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억이나 발전이념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정치경제론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구성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14 William K. Domke, *War and the Changing Global Syste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8;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15 Mitchell Bernard and Ravenhill John,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Model", p. 209; 서정근, 「한일무역불균형의 본질: 경제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 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http://congress.aks.ac.kr/korean/viewforum.php?f=116&order=1&order2=1&sort=0&sort2=0&start=24&topicdays=0>(최종 검색일: 2014. 10. 14).

공유된 사고(idea)나 신념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¹⁶ 사회적 행위는 집합적 사고(collective idea)에 따라 환경적 조건이 인식되고 투영된 주관적인 결과다. 이에 따라 구성주의 정치경제 연구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이념, 신념, 해석, 인식과 같은 규범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규범적 요인들은 법률체제, 정책기관, 그리고 정책신념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일종의 지식레짐(knowledge regime)으로 구조화된다.¹⁷ 유사한 경제적 조건하에서 국가별 대응 정책이 다양한 것은 물질적 조건의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 그리고 전통적 관행(conventional practice) 등 사회 구조의 상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¹⁸ 이 연구에서는 공유된 지식으로서 역사인식, 물질적 자원에 대한 신념체계로서 전략문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념으로 구체화되었는지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정책의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인식 문제다. 구성주의 정치경제 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계에 의미 또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공유된 사고, 신념, 그리고 지식 등과 같은 요인들이다.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객관적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지식은 신념체계로서 정치적 결단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한일 관계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역사적 기억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미래에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67.6%)에 이어 일본(64.7%)을 꼽았다.¹⁹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일본 인식은 한일 간에 무력 충

16 Rawl Abdelal et al. eds.,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pp. 2~5.

17 John Campbell and Ove K. Pedersen, *The National Origins of Policy Idea: Knowledge Regimes in the United State, France, Germany, and Denma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 1~31.

18 Rawl Abdelal et al. eds.,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p. 2.

19 김지윤 외,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2014.

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외부의 시각²⁰과는 다른 현실임에 틀림없다. 해방 후 역사인식이 한일 경제 관계의 성격과 이익을 인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쟁의 흐름을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다. 물질적 조건에 대한 인식은 생존, 경쟁, 또는 전략 등에 대한 신념의 체계를 형성하고 정책 목표나 정책 수단으로 제도화되면서 전략문화를 형성한다.²¹ 전략문화는 사회적 행위자가 핵심 이익을 규정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신념 체계이자 이를 재생산하는 제도와 지식레짐으로 체계화된다.²²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체계화되어 온 신념체계는 수출 주도 발전전략이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은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협력을 촉진시킨 동력임과 동시에 한일 경제 관계의 성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인식의 틀이다. 해외에서 도입한 자본과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하여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 발전전략상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는 한편으로 수출을 증대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일본과 경합적 산업구조가 심화되면서 협력의 요구와 경쟁의 동력이 공존하는 것 역시 수출 의존 산업구조에서 비롯되는 발전전략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정책이념으로 체계화되고 정책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되어 온 대일 경제 정책은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정책 인식을 대변한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일 경제 관계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무역협상이 계속되었고 무역 정책 수단, 산업 정책 수단이 동원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책 차원에서만 실행되던 기계, 중간재 등 부품소재 산업 정책이 부품소재특별법으로 법제화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비대칭적 경제 관계의 재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과 정

20 그 예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레시안』, 2013. 4. 5.

21 Aaron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2), 2005, pp. 34~35.

22 John Campbell, "Chapter 1: Knowledge Regime and the National Origins of Policy Ideas," of John L. Campbell and Ove K. Pedersen, *The National Origins of Policy Ideas*, 2013, pp. 3~4.

책은 바람직한 경제 관계에 대한 집합적 자기인식(collective self-perception)과 정치적 결단을 설명한다.

3. 역사인식과 한일 경제 관계 인식

해방 후 식민경제의 구속에 따른 양국 경제 관계 복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이 경제적 논리로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대만이 1952년,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1950년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에 비해 한일 관계가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것은 식민기억뿐만 아니라 냉전과 한국전쟁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1960년대 대일 경제 협력의 논리가 우세해진 가운데 정경분리 명분에 따라 1965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지만 역사적 기억과 경제적 이익 가운데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속되었다.

1) 단절의 정치와 경제 논리

해방 후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기까지의 20년은 경제 관계 복원의 동력과 단절의 정치가 갈등하던 시기다. 식민경제의 구속과 미국의 냉전전략은 한일 경제 관계 복원의 동력이었다. 식민경제의 의도와 산업화의 영향에 대한 논쟁과 상관없이 식민경제의 유산은 해방 후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남북 간, 그리고 일본 경제와 단절되면서 남한의 경제적 충격은 매우 컸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군정무역을 통해 양국 교역이 시작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군정은 물자 부족, 인플레이션과 산업시설 가동 중단으로 가중되는 사회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물자보급계획’을 추진했다. 남한에 대한 경제원조 전략의 변화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입안된 계획으로 점령 초기부터 1948년 6월까지 미 군정에 의해 도입된 물자 총액은 3억 2811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일본에서 수입한 물자가 4720만 달러로 전체

의 14%를 차지했다.²³ 대일 수입품의 대부분은 기계, 금속, 화학 등 산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이 주를 이루었다.²⁴

전국 직후 이승만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관계 복원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반공을 위해서는 일본과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다. 1948년 10월 20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의 도쿄회담 후 양국 무역 재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일본 방문이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해외 특사였던 조병옥은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 이전이라도 한일 무역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기도 했다.²⁵ 1949년 9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양국 간 통상협정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스냅 사절단’이 방한했다.²⁶ 또 1951년에는 ‘과거에 불만이 있지만 한일 공존을 위한 대일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신흥우 대사를 파견’했고, 2월 18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공산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한일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²⁷

그러나 한국이 배제된 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승만 정부의 대일 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1951년 9월 7일 이승만 대통령이 상공부가 제출한 공해어장 보호를 위한 ‘보호관할선 및 보호관할권’ 설정 건의를 반대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⁸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서 배제되면서 ‘이승만 평화선’을 선포하고 강경노선을 공식화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체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영토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위기 의식이 잠재해 있었다.²⁹ 이승만은 ‘일본의 패권이나 공산

23 김집숙, 「미군정의 민간물자보급계획」, 『역사와 현실』 제22집, 1996, 113쪽

24 차철욱, 「미군정기 한일무역의 성격」, 『역사와 세계』 제22집, 1998, 14쪽.

25 차철욱, 「이승만 정권기 한일통상협상과 무역구조」, 『역사와 세계』 제50집, 2004, 35쪽.

26 『경향신문』, 1949. 9. 21.

27 『동아일보』, 1950. 2. 18.

28 조윤수, 「한국교섭 참석자의 일본인식 변화와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토 해양연구』 1, 2011, 154쪽.

29 조윤수, 「한국교섭 참석자의 일본인식 변화와 한일회담」, 156쪽.

분자의 패권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본의 새로운 명령 지시에 보복 하느니보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까지 강조³⁰한 것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1956년과 1959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일교역을 중단시킨 결단 역시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명분이 우선시 되었던 당시의 인식을 대변한다.

2) 경제 협력의 논리와 경제 관계 인식

1960년의 정치 변동은 한일 관계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제2공화국 정부는 경제 논리를 최우선으로 한일 경제 관계 복원을 추진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원조 정책의 변화다. 미국은 1957년을 전후로 한국에 대한 원조를 군사 원조에서 경제 원조로 변경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경제부흥 정책을 담당할 부흥부를 설치하고 무역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 발전 정책을 재정비했지만 한일 경제 관계가 복원되지는 못했다. 2공화국 정부는 경제우선 논리에 따라 한일 경제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했다. 둘째, 정책이념의 변화다. 미국으로부터 원조 수입이 감소하면서 외화 확보를 위한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다. 원조 수입과 수입 제한을 통해 수입 대체 산업화를 목표로 했던 기존 정책이념에서 기간산업을 육성하되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방향이 모색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되었고 1961년 2월 2일에는 단일환율제가 실시되면서 대일 수입을 억제하던 환율 정책도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60년 일한경제협회가 설립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민간 경제인들의 방한도 이어졌다.³¹

30 이승만 연설문(1954. 8. 30), 「침략주의 일본은 증오의 대상, 자유 아주(亞洲)국가는 미국의 대(對亞)정책 주시」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연설문, <http://www.pa.go.kr>(최종 검색일: 2014. 4. 1).

31 김상준·윤대엽, 『한일경제협회 30년사』, 한일경제협회, 2013.

정치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행한 것은 산업화를 위한 경제 논리 때문이었다. 사죄와 보상 없이 관계 복원은 불가하다는 정치적 명분은 자립경제 건설을 통한 민족중흥이라는 실용적 이념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대일 경제외교에서 역사적 문제는 피하고 경제 협력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다.³² 그러나 해방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침략, 종속, 의존 등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이 쉽게 사라질 수는 없었다. 『한일회담백서』에 「한미일 협력과 경제침략설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 적극 해명하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다.³³ 백서는 ‘미국이나 서독 등의 자유제국과의 경제 협력에서는 대두되지 않는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두되는 것은 과거의 양국 간 역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민족 감정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본의 경제 침략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해명해야 했던 것³⁴은 한국 사회에서 대일 경제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변한다. 박정희 정부가 일본 자본의 직접투자를 철저하게 통제한 것 역시 일본 자본에 의한 한국 시장 지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⁵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예측화를 막기 위해 국산품 애용, 국산화 촉진 전략 등의 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이 한일 경제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이 되었다면 한일협정 체결 후 심화된 불균형 무역 관계는 부정적 인식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예속, 경제침략, 대일종속 등에 더하여 한일 경제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무역역조’(貿易逆調)다. 무역역조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지만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로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특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65년 3월 27일 개최된 한일무역회담 후 한일 양국은 공동성명을

32 이현진, 「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리: 한일정기각료회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38집, 2011, 287~325쪽.

33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대한민국정부, 1965, 139~146쪽.

34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140~141쪽.

35 David C. Cole·박영철, 『한국의 금융발전: 1945~1980』, 한국개발연구원, 1984, 72쪽.

발표하고 ‘무역역조’를 개선하여 양국 무역을 건전화하겠다고 발표했다.³⁶ ‘역조’라는 개념은 현재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전제 하에 바로잡아야 하는 의지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용어인 무역 적자나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더구나 다른 무역 적자국에는 사용하지 않은 무역역조라는 단어가 유독 대일 무역 적자의 경제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대변한다.³⁷ 한편 한일 경제 관계가 진전되면서 부품종속, 기술독립과 같은 새로운 용어들이 한일 경제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와 같이 무역적자, 부품소재와 기술 등의 일본 의존적 성격, 특히 양국 경제 관계의 불균형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역사적 기억은 여전히 중요한 틀(frame)로 작동했다. 침략, 의존, 종속 등의 용어가 대변하듯 한일 경제 관계의 성격을 인식하는 데 역사적, 정치적 갈등 관계가 투영되어 있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정상 간에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판이 일었던 이른바 ‘등신외교’ 파문³⁸이나,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대일 무역역조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등장³⁹한 것은 역사, 영토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결국 경제 관계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발전전략과 한일 경제 관계 구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관계는 급진전되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은 자본, 기술, 노동뿐만 아니라 제도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촉진시

36 『동아일보』, 1965. 3. 27.

37 미즈노 준코, 「제2장: 한국의 기술선택 전략이 유발하는 대일무역적자」, 미즈노 준코 편,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문제』, 아시아연구소, 2010, 1쪽.

38 『중앙일보』, 2003. 6. 9.

39 미즈노 준코, 「제2장: 한국의 기술선택 전략이 유발하는 대일무역적자」, 2010.

키고 또 정당화시킨 요인이다. 경제적 ‘필요’에 따라 대일 협력은 진전되었다. 반면 수출 주도의 발전 결과 대일본 무역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대일 균형을 위한 산업정책이 정책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한일 간의 경제 관계는 협력적 분업 관계가 아닌 비대칭적 경쟁 관계로 인식되었고 경제 협력의 성과가 역설적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1)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발전

한국은 소규모 내수 시장에 집중한 발전 대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외부 시장에 판매하는 수출 주도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의 성패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비교우위를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 기술 등 전략 산업의 육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정부는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등 시장에 개입했다. 그리고 수출 증진을 위해 환율 조정, 수출 보조금이나 금리 조정 등을 해주는 한편으로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 장벽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했다. 수출 주도 후발 발전의 가장 큰 특성은 내생적 혁신(endogenous innovation)이 아니라 학습(learning)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⁴⁰ 그리고 수출 주도 산업화 초기, 한국의 발전전략 학습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 또한 일본이다.

학습이라는 맥락에서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식민지 근대화 논쟁⁴¹과는 다른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 발전은 자본, 노동, 기술뿐만 아니

40 Alice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41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Atul Kohli, "Where Does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cs Come From?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World Development* 22(9), 1994; Jonghoe Yang, "Colonial Legacy and Modern Economic Growth in Korea: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ir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Society* 33(1), 2004 참조.

라 인식, 제도, 지식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⁴² 식민경제의 경험은 한국의 산업기반 그 자체보다 제도, 관행,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인적 관계 측면에서 한국의 수출 주도 산업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부터, 그리고 1965년 국교 수립 직후 민간을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식민경제를 통해 형성된 인적 관계의 요인이 컸다. 1960년 설립된 일한경제협회에는 재일동포 사업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일 민간교류의 핵심으로 활동했다.⁴³ 또 숙련 노동의 교육과 육성, 제도와 관행에 대한 경험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일본의 제도와 경험을 쉽게 학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인적 교류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기계공업육성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철강공업진흥법’(1970), 그리고 ‘석유화학공업진흥법’(1970) 등의 개별 산업육성법은 일본 법제를 도입한 것이다.⁴⁴ 따라서 산업정책도 상당 부분 일본으로부터 학습된 것이다.

경제 제도나 관행, 그리고 인적 유대를 토대로 일본을 모델로 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가 심화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나 과학기술에서 일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⁴⁵ 1962년에서 1986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66%에 달한다. 특히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되었던 1972년에서 1982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무려 78%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와 기계설비 및 플랜트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기술 도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1962년부터 1992년까지 라이선스 계약으로 도입된

42 케더럴 텔렌,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독일, 영국, 미국, 일본에서 숙련의 정치경제』, 신원철 옮김, 모터북, 2011.

43 김상준·윤대엽, 『한일경제협회 30년사』, 한일경제협회, 2013.

44 류상영, 「박정희 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 단철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253~256쪽.

45 한국은 수출 의존 산업화 전략을 채택한 대만과 비교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특성이 있다. 관련 논의는 Karl Fields, *Enterprise and the State in Korea and Taiw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기술은 8069건, 금액으로는 69억 60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은 4045건(50.1%), 금액으로는 21억 8000만 달러(31.3%)에 달한다. 특히 1962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기술 건수는 전체의 58.8%(1017건), 액수로는 36.8%(1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1966~1972년에 도입된 상업차관의 53.9%, 1973~1978년까지 도입된 상업차관의 69%는 섬유, 화학, 기계,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 투자됐는데, 그 상당액 또한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⁴⁶

이처럼 한국의 산업화가 대일 의존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으로부터 학습된 산업화 전략과 이에 따른 생산공정 및 기술채택 과정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 기술 도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산업화 경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도입이 기술혁신보다 신속한 상품생산에 필요한 시장지향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네트워크 역시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2) 발전전략과 경쟁적 의존 관계

한국 경제가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산업화 경로를 거치게 된 것은 식민 경제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에 대한 경제적 선택의 결과다. 그러나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산업구조는 1980년대, 일부 산업의 경우 1970년대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산업 이전이 지체되는 대신 일본을 기술과 부품소재의 공급기지로 하는 지역 차원의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발전전략의 분화 때문이다.⁴⁷ 그리고 발전전략의 분화는 바로 수출 주도 발전전략에서 비롯되는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전략 인식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여러 번에 걸친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수출 의존 산업구조

46 재무부·한국산업은행, 『한국외자도입 30년사』, 한국산업은행, 1986, 170쪽.

47 류상영·이승주, 「탈냉전기 한일경제관계와 플라잉 기즈 모델」, 181~182쪽.

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경제위기의 성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장 진입의 위기다. 대외지향적 수출 주도 산업화의 성공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둘째, 구조조정의 위기다. 만일 세계 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세계 시장의 구조 경기변동은 구조조정의 위기를 초래한다. 사양산업이나 중복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한국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다. 셋째, 이와 같은 위기는 궁극적으로 정책 실패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시장 예측의 불완전성이나 정책기획과 정책집행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은 실패의 위기가 반복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불균형의 위기다.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화는 대·중소기업 간, 부문 간, 산업 간, 지역 간 불균형을 구조화했다. 불균형 산업구조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쟁점일 뿐만 아니라 대일 무역적자의 구조적 원인이 되어왔다. 한국 경제가 1970년대 말,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말 등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한 것은 수출 의존 산업의 취약성 때문이다.⁴⁸

반복적인 경제위기는 한일 경제 관계의 재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증가하는 막대한 무역적자 문제는 수직적 분업을 통한 발전이나 상호 의존적 경제 관계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외채를 도입하여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외채를 상환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동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막대한 대일 무역적자는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대일 무역에서 발생하는 구조는 경제적 종속이나 예측을 넘어 지속발전을 저해하는 경제구조의 위기로까지 인식되었다. 1970년대 말 경제위기 직후 1980년대 대일 무역적자

48 수출 의존 산업구조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윤대엽, 「제도적 재량권과 산업정책의 정치」, 『한국정치연구』 21(2), 2012 참조.

축소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⁴⁹

198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와 혁신을 위해 시행된 산업정책은 대부분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했다. 대일 적자를 축소하는 방법은 일본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대신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술 향상 시책이 추진되었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다.⁵⁰ 또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기계, 부품, 소재의 국산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핵심 부품, 기계 및 소재의 국산화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국산 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정하여 규제함으로써 대일 수입을 강제로 억제했다.⁵¹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 설치된 부처별 대책반은 10여 개에 달한다. 1980년대 시행된 산업육성 및 구조조정 정책은 일방적 또는 수직적 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를 경쟁적 산업구조로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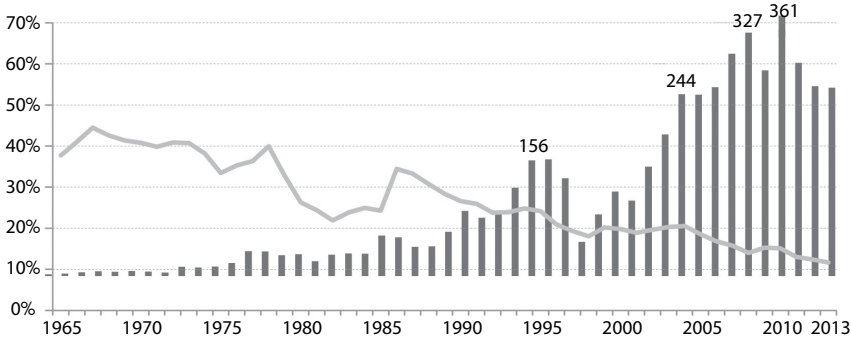
그러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대기업 중심의 최종재 산업의 성장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지체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내생적이고 자립적인 기술혁신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이 늦어지면서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와 공정기술은 일본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내부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보다 대일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최첨단 최종재 수출증가에 비례하여 대일 수입도 동반 증가하는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림 1〉은 한일 경제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 관계를 보여준다. 1960년대 40%에 달하던 대일 수입비중은 2013년 13%까지 감소했지만 무역적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2010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411억 달러인데 반해 대일 무역적자가 361억 달러였다는 것, 그리고 대일 수입의 80%가 기계 및 부품소재라는 점은 일본 의존적 수출 산업구조를 대변하는 것이

49 상공부, 『대일무역역조개선계획』 상공부, 1986; 상공부 『상공백서』, 상공부, 1987, 45~46쪽.

50 상공부, 『대일무역역조개선계획』, 52~56쪽.

51 상공부, 『상공백서』, 56~58쪽.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정보.

〈그림 1〉 대일 수입비중 및 무역적자, 1965~2013

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감광성 수지의 99%, 실리콘 웨이퍼의 70%,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반사방지 필름의 99%, 액정 편광판 보호 필름의 100%,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지 소재의 60%, 그리고 자동차의 무단 변속기 92%, 글라스의 75%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⁵² 이 때문에 2008년 한국 수출 산업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화학 35%, 금속 52%, 일반기계 67%, 전기기계 55% 등으로 일본의 68%, 76%, 86%, 그리고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⁵³

5. 정책 이념과 재균형의 산업정책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일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무역협상, 무역정책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통상마찰과 자유무역 체제가 확산되면서 차별적인 무역 규제의 활용이 어려워지면

52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 협력 성과와 과제」, FKI Issue Paper 제200호 (FIP-2014-0001), 2014, 6쪽.

53 森村秀樹, 「輸出による国内付加価値の誘発構造: 日中韓の現状比較と今後とるべき戦略」, 『JRIレビュー』 6(1), 2014, 4쪽.

서 보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수단이 시행되었다. 한일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한일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균형의 정치(the politics of rebalancing) 과정이었고 ‘바람직한’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자기인식을 대변한다.

1) 무역협상과 무역정책

무역 불균형은 한일협정 체결 이전부터 양국 경제 관계의 현안이었다. 1948년 한일통상협상이 체결되어 정부 통제로 양국 무역이 재개된 이후부터 무역적자가 계속되었다. 1950년대 중반 민간 무역이 확대⁵⁴되면서 대일 무역적자가 늘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무역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했다. 청산협정지역을 지정하여 일본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직접적으로 쿼터를 정해 수입을 제한했다. 1954년부터 수입은 수출을 통해서 획득한 외화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출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던 특혜외환제도를 폐지했다.⁵⁵ 1956년과 195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과의 교역을 금지시킨 것은 중공과의 외교관계 체결이나 북송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계속되는 무역적자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탈피라는 인식적 요인 역시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제2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일본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외자 도입과 대외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가속화되었다.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도 한일 무역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한국이 일본 경제에 대하여 하청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⁵⁶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각은 매우

54 이승만 정부가 민간 무역을 활성화한 것은 미국의 소비재 중심 원조정책에 대응하여 경제발전 투자를 위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950년대 후반 민간 부문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까지 확대되었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전후였다.

55 정진성,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 한일무역을 중심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동북아역사재단, 2005.

56 대표적으로 1965년 3월 30일 『동아일보』 보도는 한일 무역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1억 달러 정도의 무역역조를 시정하여 무역의 건전화를 이루기로 합의했지만 이러한 한일 간의 합의가 자립적인 공업화에는 불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낙관적이었다.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되면 해대, 수산물 등의 수출이 7000만 달러로 증가하고 공산품 및 가공무역 수출을 고려하면 1966년에는 1억 달러 수출이 가능해 무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⁵⁷ 그러나 낙관적 예측과는 달리 수출 주도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대일 무역적자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급증하는 대일 무역적자 문제는 한일각료회담이나 한일통상회담, 그리고 민간 차원의 회담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의제였다. 1967년 개최된 한일무역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양국 무역의 확대 균형을 위해서 각종 수입 제한의 철폐, 관세 일괄 인하, 특혜관세 조기 실시, 그리고 가공무역이나 합작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화를 위한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을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일무역합동위원회에서 '무역역조 시정을 다짐'했다는 보도⁵⁸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형은 지속됐다.

증가하는 대일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된 무역정책 수단은 1978년 시행된 '수입선 다변화 제도'다.⁵⁹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수입 초과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국가별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출입 승인을 거친다는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조문을 근거로 시행되었다. 1987년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⁶⁰에도 '국가별 수출,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을 규제한다(제35조 제5항)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여타 국가에서 경쟁적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공고하여 수입선 전환을 유도했다. 일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대일 수입규제를 위한 무역 수단으로 도입되고 운영됐다. 1981년 924개의 수입선 다변화 품목이 지정되었고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조건으로 폐지가 결정되어 1998년 폐지되었다.

57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109~133쪽.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무역역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일회담백서』에서는 무역수지, 무역 균형화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58 『매일경제신문』, 1976. 12. 20.

59 1978년 도입된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1980년 11월 무역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비공개로 운영되었다.

60 「대외무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91호, 1987. 06. 30 제정).

〈표 1〉 연도별 수입선 다변화 품목(단위: 개)

연도	1981	1987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품목	924	381	258	230	204	187	127	88

자료: 정훈·이학배, 『한·일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33쪽.

1980년대 정상외교가 복원되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간의 전향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1983년 1월 방한한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수상과 전두환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한일 신 시대’로 규정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 촉진에 합의했다(9항). 1984년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1992년 방한한 미야자와(宮澤喜一) 수상과 노태우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완화와 산업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7개항에 합의했다.⁶¹ 이어 7월 1일에는 ‘한일 무역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발표됐다.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6개월에 걸친 실무협상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은, 뼈대 없는 성과만 남겼다’는 언론의 평가는 경제문제에 관한 양국의 인식의 차이를 대변한다.⁶² 한국 측은 만성적인 적자가 일본의 지나친 기술 보호주의, 무역 장벽, 시장의 폐쇄성, 그리고 공존공영 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산업기술 격차와 혁신 능력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역적자 문제의 본질이며 분업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1992년 양국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어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인적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2)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

통상협상과 무역정책이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못

61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은 (1)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 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 (2)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 시장 확대, (3) 산업 간 교류협력 추진, (4) 한일 경제인 포럼 구성, (5)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 (6) 환경협력, (7) 투자 및 기술이전 환경 개선 등이다. 세부사항은 김상준·윤대엽, 『한일경제협회 30년사』 참조.

62 『매일경제신문』, 1992. 7. 1.

하자 산업육성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미 품목별 국산화율을 제시하고 국산화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엔화 강세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한일 간 구조적 불균형이 시장원리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개별산업육성법을 통합하여 공업발전법을 제정했다.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은 한국의 수출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업발전법은 1970년대 제정되었던 개발산업육성법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한 것이다. 개별산업육성법에 의한 산업정책이 과잉투자 와 산업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공업발전법은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육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정부는 공업발전법을 근거로 기계류 부품소재의 국산화 정책(1987~1995)과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1995~1999)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국산화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장기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1986년에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일 무역적자가 동반하여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일본 측의 노력이나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정책이었다.⁶³ 이 계획에는 대일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 방안, 그리고 기계, 부품, 소재 등 대일 수입품목의 국산화와 수입선 전환을 통해 1987년 72억 달러에 달하던 대일 무역적자를 1991년까지 20억 달러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⁶⁴

그러나 1987년을 전후로 감소하던 대일 무역적자는 199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3저 호황이 끝나고 노동분규가 이어져 경제위기 논

63 「정부가 나선 대일적자 응급처방」, 『동아일보』, 1986. 11. 10.

64 박조현 외, 「대일무역역조의 구조적 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연구논문집』, 1986, 193~222쪽; 상공부, 『대일무역역조개선계획』 참조.

의가 확산되면서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대일 무역역조 개선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 2차 5개년 계획을 재차 수립하여 시행했다.⁶⁵ 그러나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한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1997년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한일 경제 관계에 위기 인식이 확대되었다. 외환위기가 정부 주도 산업정책의 쇠퇴와 자유주의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보편적 인식과는 달리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속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대일 무역적자와 무역 불균형은 전략적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도화되고 확대되는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품소재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부품소재특별법)이다. 이 법은 2000년, 10년 기한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뒤, 2011년에 2022년까지 법적 기한이 한 번 더 연장됐다. 부품소재특별법은 부품 및 소재산업에 국한되는 특별법으로 대일 무역적자 축소와 자립적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자본재 및 중간재 산업육성은 이미 국산화 정책이나 대일 무역역조 개선정책을 통해 시행되어온 정책이었다. 정책 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부품소재 산업정책의 법제화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8월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가 “백년 하도급 국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이후다. 김대중 대통령은 “포스트 재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부품소재특별법의 제정을 지시했다.⁶⁶ 내수경기 침체와 성장 잠재력 감소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역시 대일 무역적자 축소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부품소재특별법에 근거하여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부품소재특별법의 법적 기한 만료를 앞둔 2011년 기한연장에 대한 논

65 「대일역조 적극 개선」, 『동아일보』, 1991. 6. 27.

66 윤대엽, 「제도적 재량권과 산업정책의 정치」, 204~207쪽.

쟁이 제기되었다. 지식경제부는 부품소재 산업정책에 3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출은 2001년 620억 달러에서 2290억 달러,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779억 달러로 28.5배나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대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품소재특별법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⁶⁷ 재계에서도 특별법 기한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는 국가 기반산업의 고도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⁶⁸ 최근 박근혜 정부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소재부품산업을 수출액 6500억 달러, 무역흑자 25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전체 수출대비 부품소재 산업비중을 55%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정책의 추진 목적을 '산업경쟁력의 핵심원천인 첨단소재가 대일 무역역조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또 중국의 소재부품 수출이 급증하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가 우리 소재부품산업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⁹ 이는 수출 의존 사업구조의 특성상 대일 무역역조 등의 구조적 불균형이 정부가 주도하는 재균형의 정책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대변한다.

6.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 특히 정책과정에서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 관계가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로서만 발전된 것이 아님을 검토했다. 역사, 영토 등 한일 갈등이 재현될 때마다 정경분리라는 실용적인 시각이 제기되어 왔지만 경제 관계 역시 정치, 역사, 영토 등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었다. 역사인식은 단지 정치적 갈등에만

67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부품소재산업육성 10년, 빛과 그림자」, 2011. 9. 11.

68 국회사무처, 「제302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2011. 8. 23.

6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13-16) 발표」, 2013. 11. 26.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관계의 이익과 성격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한일 경제 관계가 복원되었지만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줄곧 종속, 지배, 또는 침략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지배했다. 일본 의존적 발전전략에 따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부정적 인식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 주도 발전이 일본으로부터 학습된 결과지만 일방적 의존과 불균형 관계는 혁신적 변용과 단절을 통한 발전의 동기가 되었다. 역사적 기억이나 발전의 구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신념은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책에 투영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한일 경제 관계의 불균형 구조와 재균형의 정치는 경쟁적 의존이라는 한일 경제 관계를 구조화한 요인의 하나로 영향을 미쳤다.

역사, 전략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갈등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함의를 제공한다. 경제 협력에 관한 자유주의 시각은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낙관해 왔다. 국가 간 상호 의존의 증가가 전통적인 권력의 행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자본주의 평화론(capitalists peace),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tic peace), 그리고 상업주의 평화론(commercial peace) 등은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 단절의 비용(cost to break)이 증가하고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열망을 초월하게 되면서 갈등의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해 왔다. 한일 무역 불균형이 시장 선택의 결과라는 일본의 입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존의 경제적 가치가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만 인식될 수는 없다. 역사적 기억, 발전의 전략, 정치적 전략 등의 요인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진전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ILBI: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2, 2015

CONTENTS

4	Editor's Note	NAM Ki Jeong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26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CHUN Ja Hyun
50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NISHINO Junya
72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YOO Hyuck Soo
102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CHO Youn Soo
134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PARK Young June
168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YOON Dae Yeob
196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PARK Cheol Hee
224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NAM Ki Jeong
264	Retrospect of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after the 1945 Liberation	KIM Young Jak
290	Understanding Japanese Local Politics through Gender Analysis	SHIN Ki Young
RESEARCH NOTE		
308	Power Shifts and Japanese Bureaucracy: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Power Shift during the Two Power Shifts	SHINDO Muneyuki
ARTICLES		
328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CHOI Yun Young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5 상반기, 제1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박철희 | **편집위원장** 박규태 | **편집간사** 이은경

편집위원 강태웅, 권숙인, 김봉진, 김효진, 남기정, 목수현, 박진우, 신기영, 양일모, 원지연, 유혁수, 윤상인, 이은경, 이지원, 이지형, 임성모, 장인성, 정진성, 조관자, 최영호, 황성빈

발행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 880-8503 | **팩스** 02) 874-3689

제작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화** 02) 880-5220

ISSN 2092-6863 Copyright © 20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에 실린 글은 일본연구소 홈페이지(ijs.snu.ac.kr) 및 디비피아(www.dbpia.co.kr) 등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구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책임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일본비평」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NRF-2008-362-B00006).

차례

- 4 **편집자의 말**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남기정

특집: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 26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천자현
 50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니시노 준야
 72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유혁수
 102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조윤수
 134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박영준
 168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윤대엽
 196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박철희
 224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남기정
 264 **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김영작
 290 **특별서평**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신기영

연구노트

- 308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신도 무네유키

연구논단

- 328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최윤영

- 356 참고문헌
 366 국문초록
 371 영문초록